

귀촌일기-모내기

아침을 열며

박찬규
에코특수가치연구소
이사



올해도 모내기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모가 심어진 넓은 들판의 경치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분위기이다.

농촌에서 가장 바쁜 시기는 바로 모내기 철이다. 예전에는 품앗이로 사람들이 모를 심었지만 요즘은 이앙기로 심기 때문에 적기에 모내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모내기의 풍습도 그동안 많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모를 심을 때는 모판을 만들고 모자리에서 모를 썬 타래로 묶은 다음 지게로 날라서 눈에 일정한 간격으로 흩어놓으면 못줄에 맞추어 사람들이 모를 심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다. 점심 전에는 새참이 있었고 오후에도 한 차례 새참이 있어 허기를 달래고 농주한 사발에 농부가 절로 나오기도 한 시절이었다.

그에 반해 최근 논농사는 거의 기계화가 되어서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의 손이 필요하지 않다. 쟁기 대신에 트랙터가 논을 고르고 사람이 모를 심던 작업을 이앙기가 대신하고 있다.

남도 지방은 타 도에 비해 경작지가 넓고 수량이 풍부하여 논농사를 짓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자연환경이 좋아 2

모작을 하는 농토가 매년 늘어나 올해도 보리 수확 후에 모내기를 하느라 타이밍이 늦은 곳도 있다. 모내기 철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 관리인데 올해 비가 적당히 와주어 물 걱정은 덜었다. 필자도 지난 주에 모내기를 하였는데 모내기 도중에 이앙기가 수렁에 빠져 꺼내는데 많은 애를 먹었다. 봄철에 수렁에 고인 물을 모터 펌프로 뿜어내야 하는데 잊고 있다. 큰 일을 당한 것이다. 만약에 수렁이 있다면 봄철부터 모내기에 맞추어 수렁에 고인 물을 빼내 물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상책이다.

농촌에서는 절기에 맞추어 농사일을 하는 것이 수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지런해져야 한다. 무슨 작물이든지 적기에 파종을 해야 하고 모종을 옮겨 심어야 원하는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벼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의 파종 시기가 다소 앞당겨지고 있다. 농부들에게는 모내기와 겹쳐 수확하는 발작물도 있어서 바쁜 때이다. 관련 작물로는 늦가을부터 봄까지 자라서 모내기 철에 수확하는 양파와 마늘이 대표적이다. 하지갑자도 수확을 기다리고 있고 과일나무의 병충해 방제도 해야 한다.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는 하우스에서 온종일 보내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농번기 철에는 농부들의 하루가 24시간으로도 부족한 형편이다. 모내기 철

부터는 풀과의 전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동안 더디게 자라다가 모내기가 시작되면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논둑과 밭둑의 풀을 애초기로 베어야 하는 작업은 여전히 사람 손에 의지해야 한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도시생활이 힘들어지다 보니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나 농사일은 매일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다. 더구나 농사일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하여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고된 나날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귀농·귀촌을 실행에 옮기려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농기계를 조작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이해하기 쉽고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도 빠르다.

최근의 농촌은 젊은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일손이 늘 부족한 상황이다.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인세대가 농사를 짓고 있어 세대교체가 절실히 요구된다. 다행히 농기계의 발달이 부족한 인력의 틈을 메우고 모내기 문제를 해결해줘서 올해의 농번기철도 무사히 지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젊은 사람이 귀농·귀촌하여 농사일에 전념한다면 벼농사로 원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8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미국, 벨기에, 알바니아, 코소보, 루마니아에서 온 수십 명의 외국인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대피한 불가리아 시민들이 소피아의 바실 레프스키 공항에 도착했다. AP·연합뉴스

서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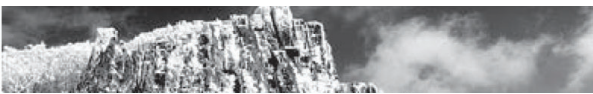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국제사회에 던진 이 한마디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지난해 12월3일 헌정질서를 뒤흔든 불법 계엄 시도는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중대한 질문을 던졌다. 과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위기를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한국은 그 해답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계엄을 해제한 국회, 헌법 절차에 따른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을 통한 새로운 정부 수립. 어느 하나 무력 충돌이나 극단으로 흐르지 않았다. 이처럼 제도와 절차를 통해 위기를 수습한 사례는 세계사적으로도 보기 드물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 즉 복원력(Resilience)을 보여줬다. 위기에 빠졌을 때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퇴행이나 몰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스스로 입증해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보여준 ‘정상국가’의 귀환’은 단순한 외교 행보 이상의 깊은 울림을 준다.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성숙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다시금 신뢰하고 있음을 보

‘민주 한국’의 귀환



여주는 신화다. 의장국 캐나다는 한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초청장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이를 수락했다. 이는 세계가 한국의 ‘정상 복귀’를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반영한다.

외교 공백이 길었던 만큼 각국 정상과의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과 에너지 연계 등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 자체로 실용외교의 시작이다. 더 큰 성과는 주요국 정상에게 ‘한국은 여전히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6개월간 끊겼던 외교 복원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혼란을 겪은 국가가 빠르게 외교 무대에 복귀하는 일은 흔치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가 대한민국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은 위기를 통해 성장하고, 실수를 통해 성숙해진 나라다. 불법 계엄이라는 비상식의 현실도,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비극도 결국은 한국 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말이 선언이 아닌 증명이 되도록,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외교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박성원 편집국장

해양·수산 공공기관 전남 이전 당연하다

전남도의회 촉구 건의안 의결

전남도의회가 18일 해양수산 관련 주요 공공기관의 전남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수산업의 거점인 전남에 종합적인 수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 분권과 현장 맞춤형 정책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지속가능한 국가 수산업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전남은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이면서 어촌·어항·갯벌 등 수산관련 산업 생태계의 핵심 지역이다. 당장 전남은 6873km에 이르는 해안선이 전국의 44%를 차지하고, 2165개에 이르는 섬은 전국의 64%에 이른다. 수산물 생산량 또한 186만톤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수산관련 공공기관이 서울에 위치해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개발이나 관리는 물론이고 관련 연구에서도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만 들고 있다.

광주 북구 ‘부끄머니’ 이름 재검토해야

공감 얻지 못하면 효과 반감돼

광주광역시 북구가 오는 9월 자치구 최초로 발행 예정인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명칭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북구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역 캐릭터 ‘부끄’와 ‘머니’를 결합한 ‘부끄머니’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명칭이 발표되자 “지역화폐가 부끄러운 돈이냐”, “쓰면서 부끄러워하라는 뜻이냐”는 조롱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명칭의 의도와는 달리 ‘부끄럽다’는 단어가 먼저 연상되면서, 지역화폐 본래 취지와 이미지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 자긍심을 높이고 사용을 자연스럽게 독려할 수 있는 명칭과 디자인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부끄머니’라는 명칭은 공감과 설득력을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

주민들은 “처음 들었을 때 농담인 줄 알았다”, “지역화폐라는 좋은 정책을 왜 이렇게 어색한 이름으로 훼손하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도 크다. 지금까지 정책 결정권과 행정적 지원 시스템이 수도권에 편중될 경우 지역의 고용 창출이나 유관 산업 발전이 더뎠고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어업 현장과 가까운 전남에 수산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거나 수산물 유통 개선,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어민과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유통과 가공 등 종합적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현장 맞춤형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의 전남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도의회의 건의안이 국회와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정치권과 협력하려는 전남도의 역할도 중요하다. 남해안권을 수산산업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미래 대한민국 수산업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지름길이다.

느냐”며 의문을 표한다. 자영업자들조차 “캐릭터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더 더욱 이상하게 들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의미가 담겨 있고 쉽고 친숙하게 기억될 수 있는 명칭이라는 평가와는 정 반대의 반응이다.

이번 명칭 선정은 6주간 전국 공모를 거쳐 636건 중 고득점 7개 후보를 추리고, 내부 평가를 통해 결정됐다고 한다. 그러나 과정이 형식에 그치고 실질적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 역시 “명칭은 정책의 얼굴이다. 좋은 정책도 이름이 공감을 얻지 못하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재검토를 조언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구는 지금이라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화폐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름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다. 지역 공동체의 가치와 자존심이 걸린 사업이다. 이름 하나로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북구의 성찰과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